

공 개



의안번호	제 68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2. 18. (제 3차)

의
결
사
항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2. 18.

1. 의결주문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은행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짓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제12조(인가의 취소), 제12조의 2(과징금), 제32조(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등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0.8.27.) 심의필

<별지>

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국민은행 : 과징금 3,123,203원 및 과태료 7,000,000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2. 조치사유

가.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점)은 금융감독원장이 2018.3.8. (주)◆◆◆◆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 (주)◆◆◆◆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2017.10.24.~2018.2.7.)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2018.3.15. 사후적으로 (주)◆◆◆◆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 자료(55건)를 2018.3.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자별 조치명세 >

관 련 자				참작사항 및 조치의견			비 고
직 위 (현직)	성 명	관련자 구 분	담당업무 (담당기간)	관련금액 (백만원)	가중 감경	조치의견	
국민은행		1. 관련	-	62백만원	-	과징금 부과 (3,123,203원)	금융위 건의
				-	-	과태료 부과 (7,000,000원)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제12조의2, 제20조, 제32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3>, 제41조 및 <별표4>

관계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7.>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7.1.17.]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7.1.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17.>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30., 2016. 3. 2., 2017. 1. 17.>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의2. 삭제 <2017. 1. 17.>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 17.>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 17.>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09. 1. 30.]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9.]

[별표 2]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해당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처음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마.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2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3	업무정지 2개월
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4	업무정지 2개월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2개월
파.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1)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법 제12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2개월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 · 정보를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1호	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호	업무정지 2개월
더. 법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 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3호	업무정지 2개월
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 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 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4호	업무정지 1개월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 4)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1) 중대한 사항(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의 경우 2) 1) 외의 사항의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5천만원 1천만원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제1호	700만원
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5천만원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거래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5천만원

	제2호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제2호	1천만원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 제1호	3천만원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2항 제2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2조제2항 제2호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자.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2)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법 제32조제1항 제3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차. 법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1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카.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2항 제3호	위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법 제32조제1항 제4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파.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경우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법 제32조제1항 제5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하.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경우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법 제32조제1항 제6호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제3호	300만원
너.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제4호	700만원
더.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2호	3천만원
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 제5호	700만원
머.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3호	3천만원
버. 법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4호	2천만원
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4항 제6호	700만원

※ 비고

-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제2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적용할 때에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란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00만원으로 한다.
-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를 적용할 때에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 또는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3,123,203원, 과태료 7,000,000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검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2018.3.8. (주)◆◆◆◆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지급업무 취급 시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 (주)◆◆◆◆은 2017.10.24.~2018.2.7.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55회에 걸쳐 약 미화 604만달러 해외송금

지급업무 당시(2017.10.24.~2018.2.7.)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2018.3.15. 사후적으로 (주)◆◆◆◆에게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은 거짓 자료(55건)를 2018.3.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제12조의2, 제20조, 제32조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3>, 제41조 및 <별표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외환감독국
연 락 처	2100-2855	3145-7938